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7.7.(화) 제26-40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무역협정) USMCA 연례 재검토 체제 전환에 따른 현지 반응 및 전망 ····· 2
- (통상) 美 독립 250주년 계기, 제조업 부흥·관세 중심 통상기조 부각 ····· 5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관세) 美 상무부, 무연탄 수입 대상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조사 착수 ····· 9
- (핵심광물) 中, 희토류 수출통제 지속 ····· 9
- (조선업) 美 하원 공화당 지도부, 트럼프 대통령에 존스법 면제 종료 요청 ····· 10
- (관세) USTR,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공청회 개최 ····· 11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행사) CSI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ATO 등 행사 3건 ····· 12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3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14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7.8(수)	• USTR 301조 강제노동 관련 공청회(7.7~7.9)
7.9(목)	• 7월 첫째 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Weekly Jobless Claims)
7.13(월)	• 6월 국고 잔액(Monthly Treasury Balance)
7.14(화)	•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워싱턴 D.C. 포커스

(무역협정) USMCA 연례 재검토 체제 전환에 따른 현지 반응 및 전망

- **美의 협정 갱신 거부로 USMCA 협정은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
- **USTR, 협정 자체의 문제점과 미국의 對캐나다-멕시코 무역적자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공급망, 원산지 규정, 관세 등이 연례 재검토 대상으로 산업 전반 불확실성 우려**

1. 개요

□ **美 무역대표부(USTR), 캐나다-멕시코와의 공동 재검토 화상회의 직후 'USMCA 협정 갱신 거부'*공식 발표,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7.1)

* 캐나다 멕시코는 16년 연장에 동의, 그리어 대표, 미국은 USMCA 현 형태로 갱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did not agree to renew the USMCA in its current form)고 밝힘.

- **그리어 대표는 ① USMCA 협정의 문제점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양국과 협의 지속, ② 문제 해결 또는 협정 종료 전까지 협정의 효력 유지 강조**

* ('25년 기준) 對멕시코 무역적자 1,970억 달러, 對캐나다 무역적자 483억 달러

- USTR은 성명에서 7.20-24일 멕시코와 3차 양자 협상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캐나다와의 협상 일정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 **USMCA 갱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 2036년까지 3국 중 한 국가라도 탈퇴를 선언하면 종료, 2036년 7월 1일 자동 종료 예정**

〈USMCA 협정 개요 및 재검토 결과에 따른 핵심 사안 〉

▸ '18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체결한 협정으로 '20.7월 발효

▸ 협정의 유효기간은 16년(~'36)으로, 6년마다 3국 간 공동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공동 검토에서 **3국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만 협정이 갱신**되며, 갱신시점으로부터 16년간 협정 효력이 연장되나, → '26.7.1 공동 검토 후 **협정 갱신 불발로 잔여기간(10년, '~36) 동안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 잔여기간 중 연례 재검토에서 3국 합의 도달 시, 협정 기한은 16년 추가 연장 혹은 6개월 사전 통보 시 탈퇴 가능

2. 현지 반응 및 전망

□ 현지 반응

• (캐나다·멕시코 정부) 미국의 USMCA 갱신 거부에도 협정의 현행 효력 유지를 강조하며 협의 지속 의지 표명

- **(캐나다)** 르블랑 장관은 공식 성명(7.1)에서 'CUSMA*는 2036년까지 유효하며 언제든 16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철강·알루미늄·자동차·목재 관세 철폐가 핵심 의제"로 제시, 갱신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

  *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의 약칭으로, USMCA의 캐나다식 명칭 멕시코에서는 T-MEC(Tratado entre México, Estados Unidos y Canadá)로 명칭

- **(멕시코)** 에브라르 경제장관은 기자회견(7.2)에서 '협정은 2036년까지 유효하고 수정된 바 없으며, 연례 검토는 미결 쟁점을 해마다 축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

• (美 의회) 공화당은 갱신 거부를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동조·반대가 혼재

- **(공화당·지지)** 하원 세입세출위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현상 유지를 거부한 것은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지지 성명을 발표

- **(민주당·동조)** 들라우로 세출위 간사현행 USMCA의 단순 연장에 반대하며, 일자리 역외 이전·무역적자 급증 등 협정의 실패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요구

- **(민주당·반대 및 우려)** 베이어 의원은 '불확실성 조장·협정 약화'를 우려, 하원 농업위 민주당 의원 20명은 연서 서한을 통해 '의회와의 소통 없이 이뤄진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며 농산물 수출 기회 상실에 대한 대책을 요구

• (업계·협회) 업계는 공급망 안정성·무관세 혜택 유지를 최우선으로 요구하며 3국 체제 협정 유지를 일관되게 촉구, 노동계는 갱신에 조건부 반대

- **(美 자동차정책위원회(AAPC)/자동차 기업 연합)** USMCA는 수십억 달러 투자·수천 개 일자리의 근거로 3국 협정 형태 유지 및 신속한 합의 촉구

- **(리테일산업협회(RILA)/소매업체)** USMCA는 공급망 계획·북미 투자·소비자 상품교역에 필요한 확실성 제공, 불확실성 최소화 요구

- **(서비스산업연합(CSI))** USMCA는 서비스·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기준으로 3국 체제 기반 즉각 연장 촉구

- **(USMCA 농업연대, 美 농업총연합 등)** '협정은 농부·어부·농촌 공동체의 생계에 핵심으로 3국이 강화된 USMCA 갱신을 위해 진전을 계속해 나가기를' 촉구

- **(노동계/국제기계항공노조)** 노동기준 대폭 강화 없이는 연장 반대, 검토 기간 활용해 노동기준 강화·원산지 규정 개선·저임금 역외 이전 억제 촉구

• **(언론) 갱신 거부 자체는 '예상된 결정'으로 평가하면서도, 이후 지속될 협상·산업 전반 불확실성과 3국 간 비대칭 구도 보도**

- **(블룸버그)** 협정 갱신 결렬로 북미 공급망 규칙·원산지 규정·무관세 혜택 등이 매년 재검토 대상이 되어 자동차, 농업, 소매,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전망

- **(폴리티코)** 결정 자체보다 이후 불확실성 강조, 의회·업계·노동계 분열 반응 조명

- **(더 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는 협상 배제, 자제한 멕시코와는 협상 진전이 있음을 언급하며 캐나다와 멕시코 차별화 구도가 명확하다고 보도

• **(싱크탱크·컨설팅) 3국 경제통합의 실물 효과를 실증하면서도, 연례 검토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고착과 기업 투자 위축을 최대 리스크로 경고**

- **(브루킹스)** 역내 교역이 USMCA의 교역 증대* 효과를 실증했으나, 'USMCA가 위협 기반 재협상으로 진행될 경우,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형식화 위험' 경고

* 2020년 1.07조 달러에서 2024년 1.63조 달러로 37% 급증

- **(피터슨경제연구소)** '협상 실패 시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에 10~15% 일괄 관세 및 추가 232조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경고

- **(Brownstein·로펌)** 연례 불확실성 상시화·원산지 규정 강화의 투트랙 접근 가능성 언급, 현재로서는 협정 유효·특혜 관세 유지·통관 절차 변경은 불필요하다고 강조

- **(Baker Tilly·컨설팅)** '수입업자에게 즉각적인 규정 변화는 없으나, 연례 검토 개시에 맞춰 원산지 규정·관세 이행 준수 체계를 지금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

□ 전망

• **연례 검토 체제 장기화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평가되며, 협상 진전 여부는 3국간 협상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

- **(미·멕시코)** 7.20~24일 멕시코시티에서 3차 협상(비자동차 공산품 원산지 규정 강화·항공우주·IP·수질 등) 예정

- **(미-캐나다)** 르블랑 장관은 인터뷰(7.5)에서 연례 검토의 구체적 진행 방식 관련 그리어 USTR 대표에 구조화 방안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협상 구도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캐나다 현지 언론 보도)

• **현지 전문가들은 '수정·갱신', '연례 검토 장기화', '미국의 조기 탈퇴'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수정·갱신을 중기('27~'28) 목표로 전망**

- ① **(USMCA 수정 후 조기 갱신)** 미·멕 협상 우선 타결, 캐나다 합류 시 원산지 강화 등 미국 요구를 반영한 조건부 수정 협정 갱신 가능성

- ② **(연례 검토 장기화)** 협상 타결 불발 시 매년 재협상 압박 상시화 및 공급망 불확실성·투자 위축 장기화 가능성

- ③ **(미국 조기 탈퇴)** ▸트럼프 대통령 탈퇴 가능성 언급, ▸탈퇴 시 MFN 관세(자동차 2.5%, 경트럭 25%) 복원. ▸피터슨경제연구소*, '10~15% 일괄 관세 가능' 언급

*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미국 탈퇴 후 캐나다·멕시코에 10~15% 일괄 관세 추가, 철강·알루미늄은 50%, 비북미산 자동차 부품에는 25% 추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 **(의회 변수) 탈퇴 결정 시 의회의 협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협상 타결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브래디 전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할 권한은 있으나, 수백만 개 일자리가 걸린 파트너십 해체 시에는 의회가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고 언급

* USMCA 탈퇴 자체는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완전한 효력 상실에는 미 의회가 USMCA 이행법(implementing legislation)을 폐지해야 만 가능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USTR(7.1) 인사이드(7.1, 7.1), 블룸버그(7.1), 등 현지 언론, 싱크탱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통상) 美 독립 250주년 계기, 제조업 부흥·관세 중심 통상기조 부각

■ 美 정부, 독립 250주년을 계기로 미국 제조업 부흥과 '미국 우선' 경제정책 성과 강조

■ 관세·투자유치·공급망 재편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며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확대 필요성 부각

■ 현지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이 산업보호·경제안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 확대

1. 개 요

□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제조업 부흥과 경제주권 회복 메시지 강조

• 미국은 2026년 7월 4일 독립 250주년을 맞아 국가적 기념행사를 개최, 미국의 역사적 성취와 함께 제조업·일자리·경제안보 성과를 주요 메시지로 제시

- 백악관은 독립 250주년을 미국 건국 이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로 규정하고, 미국의 번영과 국가 경쟁력 회복을 강조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정책, 투자유치, 규제완화, 에너지 확대 등을 제조업 부흥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며 'Made in America' 기조를 지속 홍보

* 기존 America First 통상·산업정책의 성과의 대내외적 부각 성격

2. 상 세

□ 관세정책을 제조업 부흥과 경제안보 확보 수단으로 활용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단순한 무역규제 수단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회복, 공급망 안정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제시

- 백악관은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전략 금속에 대한 관세 조정과 관련해, 수입 의존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완화하고 미국 내 생산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특히 철강·알루미늄·구리, 자동차, 목재, 첨단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232조 관세와 상호관세를 활용하며 전략산업 보호 기조를 강화

- 행정부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 유도 수단으로도 홍보

• **백악관은 최근 제조업 지표 개선과 민간투자 확대를 'Made in America' 정책의 성과로 제시**

- 백악관은 2026년 1분기 제조업 고용이 3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고, 제조업 활동 지수도 개선됐다고 발표하며 미국 제조업 회복세를 강조

- 또한 관세, 에너지 비용 인하, 규제완화, 투자 인센티브가 결합되면서 미국 내 공장 신설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

□ 미국 통상논쟁의 역사성과 보호무역 회귀 논의 확대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계기로 미국의 통상 논쟁이 건국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역사적 쟁점이라고 분석**

- PIIE는 미국 독립선언 당시 식민지의 주요 불만 중 하나가 영국의 무역 제한과 과세였으며, 독립선언문에도 영국이 식민지의 대외무역을 차단하고 동의 없는 세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

- 또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관세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반복해 왔으며, 19세기에는 관세가 재정수입 확보와 제조업 보호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

- PIIE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와 FTA 확산으로 미국 관세율이 하락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관세가 다시 미국 경제·외교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고 평가

• **현지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이 전통적 자유무역 확대보다 산업보호,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확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

- 특히 최근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제조업 기반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수입 비용 상승, 기업 부담 증가, 동맹국과의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도 내포

- 미국 내에서는 관세가 제조업 회복과 협상력 제고에 필요하다는 평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교역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

3. 현지 반응 및 전망

□ 독립 250주년 계기,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내외 상반된 평가

- **현지에서는 독립 250주년 행사가 미국 제조업 부흥과 경제주권 회복을 강조하는 정치적 계기로 활용됐다는 평가**
  - 백악관과 행정부는 관세, 투자유치, 공급망 재편을 미국 경제 재건의 핵심 성과로 제시하며, 미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지속 강조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중심 정책이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의 비용 부담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

- **Guardian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거래적 외교가 동맹·경쟁국 모두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
  - 중국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경제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중국 내 반미 정서와 자국 산업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캐나다에서는 USMCA의 불확실성과 대미 의존도 축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관계가 오히려 취약요인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확대
  -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에서도 관세, 기술규제, 안보비용 분담 등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확대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거래적·조건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

- **현지 언론은 미국 통상정책은 독립 250주년을 계기로 부각된 제조업 부흥, 전략산업 보호, 공급망 내재화 기조를 중심으로 지속 전개될 것으로 전망**
  - 특히 관세를 협상수단이자 산업정책 수단으로 병행 활용하며, 외국기업의 미국 내 생산·투자 확대(특히 자동차, 반도체, 핵심광물 등)를 지속 유도할 가능성에 무게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백악관(4.22)(보도자료), PIIE (7.1), Guardian (7.3) 등 종합

미국 경제통상 동향

(관세) 美 상무부, 무연탄 수입 대상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조사 착수

• **美 상무부가 무연탄 및 일부 제철용 유연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6.29)**

- 조사 대상은 무연탄(Anthracite Coal)과 제철용 역청탄(Metallurgical Bituminous Coal)으로, 전기로 제강 및 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원료로서 국내 철강 생산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검토

-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는 연방관보 게재 후 14일간 업계 의견을 접수하며, 공급망 안정성, 수입 의존도, 국내 생산능력 및 추가 무역조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

• **232 조사 결과에 따라 무연탄 수입 규제 가능성 확대, 철강 업계 비용 부담 전망**

- 상무부는 국내 수요 충족 가능성, 주요 수출국 의존도, 외국 정부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관행,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 등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종합 평가할 계획

- 조사 대상에는 특정 국가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미국의 주요 공급국인 캐나다·콜롬비아·남아프리카 공화국·페루 등으로부터 무연탄 수입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또는 수입쿼터 등 232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 추가 관세 부과 시 국내 무연탄 생산업체는 해외 경쟁업체 대비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으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철강업계는 원자재 조달 비용 및 생산비 부담 확대 가능성

-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석탄산업 지원 및 공급망 자립 강화 기조와 연계된 조치로, 자동차·목재·구리 등에 이어 진행 중인 232조 국가안보 조사 가운데 하나로 평가

▪ 자료원	폴리티코(7.2), 연방관보(7.7)

(핵심광물) 中, 희토류 수출통제 지속

• **중국은 '25.4월 희토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이후 5월에도 통제 기조를 유지했으며, 희토류 화합물·금속의 對미국·일본 수출 감소세 지속**

- 對미 희토류 화합물·금속 수출은 3~4월 일시 회복 후 5월 다시 0톤을 기록해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대미 수출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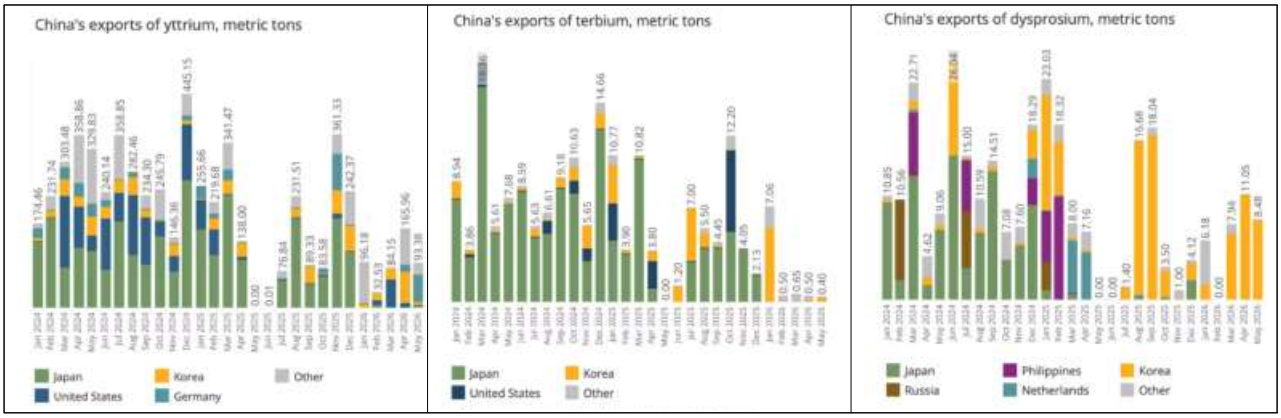
- 對일 희토류 화합물·금속 수출은 1월 추가 통제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對일 영구자석 수출도 5월 감소

• **품목별로는 대부분 수출이 제한됐으나, 디스프로슘은 예외적으로 예년 수준 유지**

- 이트륨·테르븀·루테튬 산화물 수출은 통제 이전 대비 크게 감소하며 제한적인 수준 지속

- 반면 디스프로슘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을 유지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은 한국

〈중국의 희토류 품목별(이트륨·테르븀·디스프로슘) 수출 추이〉



[자료원] Silverado Policy Accelerator

▪ 자료원	Silverado Policy Accelerator(6.26)

(조선업) 美 하원 공화당 지도부, 트럼프 대통령에 존스법 면제 종료 요청

•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공화, 루이지애나), 감독위원장 제임스 코머(공화, 켄터키),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공화, 루이지애나) 등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존스법* 예외를 8월 16일 예정대로 종료할 것을 촉구**

* **존스법(Jones Act)**: 미국 내 항구 간(푸에르토리코·하와이·알래스카 포함) 화물 운송 시 미국산 선박·미국인 선원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미국 내 LNG·프로판 운송선 부재 및 원유·가솔린 운송선 부족으로 인해 연료 가격 형성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평가

- 존스법 예외 조치는 이란 폭격 이후 급등한 연료·비료 가격 대응을 위해 발령됐으나, 서한은 미국 선박이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도 외국적 선박이 운항한 사례가 있어 자국 해운업 고용에 대한 우려를 지적

- 로이터, 백악관은 2차 예외 조치 연장이 8월 16일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추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행정부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결정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유보했다고 보도

- 공화당 지도부는 연료·비료 가격 대응을 위한 대체 정책수단 사용을 요청한 상태로, 웨이버 연장 여부는 8월 16일 만료 시점까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

▪ 자료원	International Trade Today(7.1), 로이터(7.1)

(관세) USTR,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공청회 개최

• USTR, 301조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관련 이해관계자 공청회 진행

- **(배경)** USTR,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26.3.12)
  → 조사결과 발표(6.2, 60개국 전원 미비/미이행 판정, 관세 10~12.5% 부과 제안)
  → 최종 조치 전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진행(7.7~7.9)

- **(공청회 일정)** 7.7~7.9 3일간 총 20개 패널, 60여개국 정부대표 및 철강·섬유·자동차부품·수산물·주류 등 업계단체가 참석, 강제노동 301조 관세 관련 논의

일정(미 현지 기준)	이해관계자 패널
7.7(화)	패널 1~7: 칠레·에콰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멕시코·페루 등 정부 대표 및 철강·목재·화학·에너지 업계 및 단체
7.8(수)	패널 8~14: 인도·요르단·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파키스탄 정부 및 노동감시단체(China Labor Watch 등), 육류·와인·수산물 업계
7.9(목)	패널 15~20: 섬유·의류(면화), 소비재·가전, 자동차 부품, 소형가전 업계 및 각국 대사관

[자료: USTR]

• (사전 의견 제출) 공청회에 앞선 사전 의견 제출에서 각국은 조사의 법적 타당성·형평성을 반박하거나 품목별 예외 요청 등으로 대응

- ① **(조사 타당성 반박)** ▸스위스는 자국 제도의 견고성을 주장하며 美 산업 피해 증거 부재를 지적, ▸호주는 美-호주 FTA(AUSFTA) 위반 소지 및 인신매매 보고서 Tier 1 등급을 근거로 조치 부당성 제기

- ▸인도·브라질은 USTR이 301조 상 입증요건(불합리성·자국 특정 피해) 불충족 반박, 중국·니카라과 조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

- ② **(형평성 문제 제기)** ▸노르웨이는 EU 강제노동규정(FLR)에 동참 예정임을 근거로, 낮은 관세율(10%) 적용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관세율 인하 요구

- ③ **(품목별 예외· 유예/관세 인하 요청)** ▸태국은 원산지·원료 출처가 명확한 7개 품목군에 대한 관세 제외를 요청, ▸한국(한국무역협회)은 관세 유예 혹은 관세율 10%로 인하 요청

* USTR은 공청회 이후 7월 14일 (청문회 마지막 날로부터 5일 이내) 반박 의견 제출 마감 예정

▪ 자료원	USTR(공청회일정), 인사이드(6.24)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의회는 7월 9일(목)까지 휴회

* 7월 7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CSIS	7/13(월) 10:00 am	〈China and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s: The Legal, Economic, and Diplomatic Issues〉 ▪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제노동과 산업 과잉생산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301조를 다루고, 전문가들은 그 법적·경제적·외교적 의미를 분석하고 2017-2018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조사와 비교	링크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7/14(화) 10:00 am	〈A Strategic Rethink: Congress Versus the President on US Trade Policy〉 ▪ 대통령에게 위임해 온 의회의 통상정책 권한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최근 갈등과 전략적 재조정 필요성 속에서 이를 재검토하는 논의	링크
CATO	7/14(화) 11:00 am	〈The Jones Act Waiver: Lessons Learned and What Comes Next〉 ▪ 최근 존스법 면제가 상업 활동, 물류 이동, 그리고 미국 경제 전반에 어떤 실제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	링크

* 7월 7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Manhattan High-Rise at Risk of Partial Collapse, Prompting Evacuations (맨해튼 초고층 건물 붕괴 위험...인근 건물 '긴급 대피 소동')
	화이자 본사로 쓰였던 맨해튼 미드타운의 고층 건물이 현재 아파트로 개조 중인 가운데, 건물 21~22층의 기둥이 휘어지며 붕괴 위험에 처한 것으로 밝혀져.
The Washington Post	Trans people are fleeing red states for Seattle. The city can't keep up. (트랜스젠더 '시애틀 엑소더스'...도시 수용 한계 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성소수자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보수 성향 주를 떠나 시애틀로 이주하는 트랜스젠더가 급증하고 있어. 시애틀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검토 중
The New York Times	The World Cup Stood as a Break From U.S. Politics. Then Trump Got Involved (결국 월드컵에도 개입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등에 몰두하며 월드컵에서 한 발 물러서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축구대표팀 폴라린 발로건의 출전 정지 조치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져
CNN	Trump repeats Greenland "should be controlled by US," but acknowledges it would hurt NATO ties (트럼프 "그린란드는 미국이 통제해야"...나토와의 갈등 불가피 인정)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 거점이라며 그린란드를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해. 다만, 이러한 구상이 나토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인정
USA Today	All the famous guests at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s wedding (월드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애덤 샌들러는 주례로 섰으며, 브래들리 쿠퍼, 에드 시런, 톰 크루즈, 스티븐 스필버그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 미국 동부 시간 7월 7일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21	美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20	트럼프 대통령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 시사점	2026.6월
US26-19	OECD「Steel outlook 2026」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18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2026.6월
US26-17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현지 동향 및 전망	2026.6월
US26-16	美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추진 현황 및 현지 반응	2026.5월
US26-15	美 국제무역법원의 무역법 122조 관세 위법 판결 주요 내용 및 전망	2026.5월
US26-14	美 하원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 패키지 의결 동향 및 주요 내용	2026.5월
US26-13	美『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6.5월
US26-12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 232조 관세 개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4월
US26-11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	2026.4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5.28.		
2026.2.6.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